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04호
2021. 5. 3

정책동향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시장과 괴리, 현실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점진적 접근 방안

시장동향

-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건설논단

- 우리나라의 안전, 경제 그리고 미래 : 적기·적재·적소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시장과 괴리, 현실화 필요

- 최근 3년 분석 결과 중소 건설업의 비율 상승 추세 두드러져 -

■ 건설업(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 이후 약 32년간 6%로 상한 고정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에서 밝히는 일반관리비의 내용과 비목은 다음과 같음.²⁾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임.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나아가 일반관리비의 상한(upper limit)을 규정하고 있음. 즉,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따라서 제도적으로 일반관리비율은 ①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② 일반관리비의 비목에 맞는 세부 비목을 우선 분리한 후 ③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관리비율로 하되, ④ 산업별로 상한을 두는 체계로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율 지속 증가 추세, 중소 건설업은 상한 6%와 괴리 심화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의 최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상 건설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목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경장연구개발비, 보험료를 일반관리비로 인정하고 계상함.
 - 이는 ‘판매비’ 부분을 넓게 제외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반관리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함.
- 분석 결과, 전체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지난 2017년 6.22%, 2018년 6.74%, 2019년 7.35%로 지속 증가함.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은 6.77%로 분석됨.
- 반면, 중소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동 기간 8.42%, 9.19%, 9.58%로 나타남. 전체 건

1) 1989년 제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6%로 규정함.

2)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밝히는 일반관리비의 내용과 비목도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설업과 마찬가지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동 기간 평균은 9.06%로 분석됨.

- 전체 건설업 대비 중소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 간 동 기간 평균 격차는 2.29%p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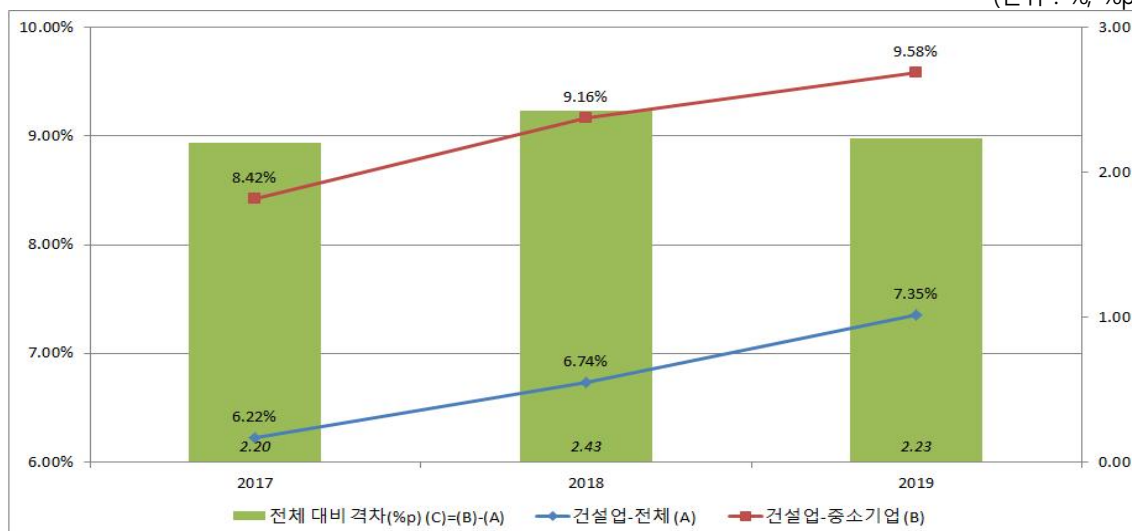
<표 1> 한국은행 건설업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계정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	-----------------------	-------------------------	--

주 : 음영표시 된 계정이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비목임.

<그림 1>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추이(2017~2019년)

(단위 : %, %p)



주 : 한국은행, 건설업 손익계산서상 비목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를 일반관리비로 계상함. 우(右)측은 전체 건설업 대비 중소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 격차(%p)임.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건설업 손익계산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수조사).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상승의 배경에는 건설업 규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산업정책 측면의 안전 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출 증가, R&D 투자 확대, 투입인력 관리 측면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건설 기술인력·기능인력 수급 불안정, 하도급 규제 강화 및 직접시공 요구 확대,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증가, 재해·재난 빈도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리스크 심화(2019년 이후) 등의 환경 변화가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더 늦기 전에 시장과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제도로 인한 부작용 완화가 필요함. 특히 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이 중소 건설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② 일반관리비율의 상승요인이 지속 발현·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③ 산업 평균 수준이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rule)인지 등을 정책당국이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 산업 특성을 반영한 비용 체계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비용 지원 필요 -

■ 건설사업 안전관리비용, 발주자 부담

- 국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되며, 두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
- 법적으로 안전관리비용 계상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한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하며, 이는 건설업의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국내 모든 산업에 적용됨.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대표적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³⁾에만 적용됨. 이는 제조업과 달리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결과임.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 사업주 부담

-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은 추가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본사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 차이가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업에만 적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에

3)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에 계상함.

적용되는 법률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제4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명시함.
 - 이로 인해 기업은 본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보충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하기에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타 법률과 달리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가진 건설업 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본사 안전관리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의 안전전담 부서를 갖춘 기업에 한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본사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전담 부서를 갖추는 것은 중소 건설기업에게는 녹록지 않으며, 안전전담 부서를 갖춘 대형 건설기업에서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부족한 현실임.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비용 체계 마련 필요

-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업은 일반관리비 혹은 이윤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 건설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서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
 - 따라서, 정부는 건설기업의 현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점진적 접근 방안

-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충당금 설정과 관련해 단계적인 기준 마련·실행 필요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중

-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18년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⁴⁾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커지면서 동 법률의 입법화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짐.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지속되고 있어

- 법 제정 시기를 전후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부처별 긴급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6월에는 「기반시설관리법」상의 관리대상 시설물 중 15종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됨.
- 동 대책에 포함되었던 15종의 주요 기반시설은 현재 「기반시설관리법」의 직접 적용대상 시설물임.⁵⁾

<표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대상 시설물

대분류	소분류	기반시설
중대형 SOC(7)	교통시설(4)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방재시설(3)	댐(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
지하 시설물(8)	지하관로(5)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지하구(3)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정부 발표자료 p2의 표 인용.

-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외 각 부처 시설물 관리주체들과 합동으로 15종 시설물에 대한 (4년 예정의) ‘인프라총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⁶⁾ 2020년 12월에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⁷⁾
- 시설물 정보 DB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더불어 개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 역시 현재 진행 중임.⁸⁾

4)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고, 12월 4일의 백석역 노후 열수송관 파열사고, 12월 8일의 강릉 KTX 탈선사고 등을 들 수 있음.

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참고.

6) 대전일보, “국토부, 국가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실시”, 2020.6.2.

7) 국토교통부(2020. 12. 28),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보도자료의 내용 참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들 존재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① 관리 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법 제11조)과 ‘성능개선기준’ (법 제13조)을 마련해야 하며, ②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관리주체들은 ‘성능개선충당금’ 을 적립해야 함(법 제23조).
- 하지만 관리감독기관들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관리감독기관들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보와 그에 기반한 미래 발생 비용의 추계가 가능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음.
 -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에 관리감독기관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과 ‘성능개선 공통기준’ 을 제정고시했으나, 아직까지 지자체 중 스스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한 지자체는 ‘광주’ 한 곳에 불과함.⁹⁾
- 성능개선충당금 마련을 위한 재원, 충당금 설정 기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리주체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단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보완 노력 필요

- 정부는 ① 관리감독기관들로 하여금 우선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른 단순한 형태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기준을 수립하며,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상용화 이후에 동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형태로 기존의 기준들을 개정토록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단계에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안전등급 ‘D’ 이하 시설물, 성능개선기준은 안전등급 ‘C’ 인 시설물에 각각 적용토록 하되, 이들 기준 속에 시설물 상태에 따른 점검진단 실시주기 재설정, 임시보강 및 유지보수 등 필요작업의 수준 결정, 필요작업 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동 기준에 입각해 개별 관리주체들이 실질적인 관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이면서 해당연도의 자산장부가액이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진 시설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 순감가상각액(=감가상각액-수선유지비용)을 매년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설정된 충당금을 해당 시설물의 차년도 수선유지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충당금을 적립해 우선 사용하는 관리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요비용 중 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 역시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8) 신아일보, “내년까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20. 12. 14.

9) 광주시(2021. 2. 22), 「광주시,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추진」, 보도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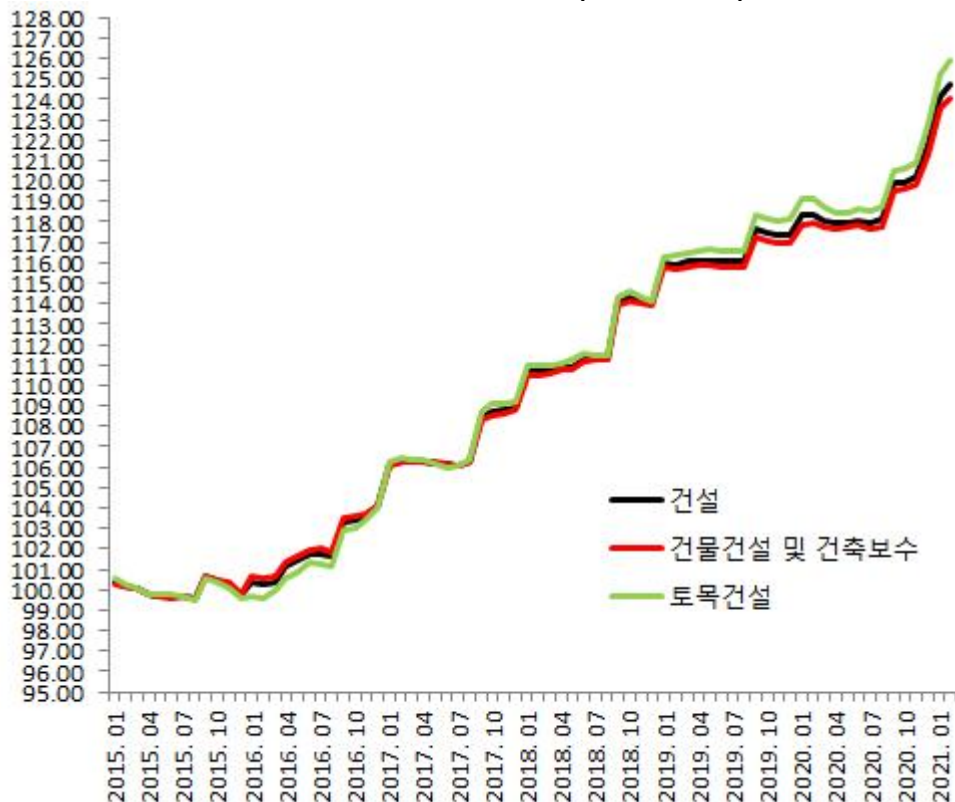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 해외의 공급 능력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주요 자재가격 상승 -

■ 최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세

- 2020년 9월 이후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기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21년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6월 대비 5.6% 증가했음.
- 이하에서는 최근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건설업 임금과 주요 자재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건설공사비지수 추이(2015년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작업반장 및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일급)

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2.8%와 2.0% 상승함.

- 2018년 산업연관표에서 세부 업종별로 피고용인 보수의 총투입계수는 주거용 건물 0.319, 비주거용 건물 0.288, 건축보수 0.325, 도로시설 0.270, 철도시설 0.279, 항만시설 0.257, 하천사방 0.347, 상하수도시설 0.365, 농림수산토목 0.323, 도시토목 0.308, 환경정화시설 0.290, 통신시설 0.344, 전력시설 0.337, 산업플랜트 0.359, 기타 건설 0.330 등임.
- 이를 감안할 때,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은 건설자재와 이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건설업 세부 부문별 주요 중간투입재와 투입비율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건축보수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 시설	농림수산 토목	도시토목	환경정화 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산업 플랜트	기타 건설
레미콘 (10.0%)	건축용 금속제품 (8.7%)	건축용 금속제품 (15.6%)	아스콘 및 아스팔트 (12.1%)	선재 및 케이블 (13.5%)	콘크리트 제품 (15.1%)	콘크리트 제품 (22.8%)	철강관 (42.3%)	건축용 금속제품 (12.5%)	아스콘 및 아스팔트 (17.4%)	건축용 금속제품 (14.5%)	전선 및 케이블 (28.5%)	전선 및 케이블 (29.9%)	철강관 (9.5%)	건축용 금속제품 (8.3%)
건축용 금속제품 (8.2%)	레미콘 (7.2%)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11.6%)	레미콘 (11.3%)	레미콘 (8.1%)	구조물용 금속제품 (6.9%)	레미콘 (6.5%)	콘크리트 제품 (5.4%)	콘크리트 제품 (9.7%)	콘크리트 제품 (6.4%)	철근 및 봉강 (7.9%)	건축용 금속제품 (8.4%)	발전기 및 전동기 (5.9%)	표면처리 강재 (7.5%)	철강관 (6.1%)
철근 및 봉강 (6.2%)	철근 및 봉강 (4.7%)	레미콘 (3.2%)	구조물용 금속제품 (9.2%)	구조물용 금속제품 (4.9%)	레미콘 (5.7%)	경유 (4.0%)	공기 및 액체 여과기 (5.2%)	구조물용 금속제품 (6.4%)	레미콘 (6.4%)	공기 및 액체 여과기 (5.2%)	유선통신 기기 (8.3%)	구조물용 금속제품 (5.3%)	콘크리트 제품 (7.0%)	철근 및 봉강 (4.5%)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4.3%)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3.8%)	기타 플라스틱 제품 (2.1%)	콘크리트 제품 (8.5%)	콘크리트 제품 (4.7%)	경유 (4.8%)	철근 및 봉강 (3.4%)	금속주물 (2.5%)	경유 (5.3%)	철강관 (5.8%)	철강관(2 .2%)	기타 무선통신 장비 및 방송장비 (7.2%)	변압기 (5.2%)	건축용 금속제품 (6.6%)	콘크리트 제품 (2.9%)
구조물용 금속제품 (2.9%)	구조물용 금속제품 (2.8%)	제재목 (1.9%)	건축용 금속제품 (5.1%)	철근 및 봉강 (3.3%)	철근 및 봉강 (3.7%)	철강관 (2.8%)	경유 (1.9%)	제재목 (4.8%)	경유 (4.8%)	콘크리트 제품 (2.0%)	구조물용 금속제품 (4.2%)	내연기관 및 터빈 (4.7%)	구조물용 금속제품 (3.8%)	경유 (2.9%)
목재가구 (2.8%)	석제품 (2.5%)	건축용 목제품 (1.8%)	경유 (4.1%)	건축용 금속제품 (2.5%)	철강관 (3.4%)	아스콘 및 아스팔트 (2.7%)	레미콘 (1.5%)	표면처리 강재 (3.3%)	건축용 금속제품 (4.3%)	형강 (1.8%)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3.8%)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3.8%)	철근 및 봉강 (3.6%)	나사 및 철선제품 (2.5%)
산업용 운반기계 (2.6%)	콘크리트 제품 (2.5%)	콘크리트 제품 (1.7%)	철근 및 봉강 (3.0%)	형강 (2.5%)	골재 및 석재 (2.4%)	나사 및 철선제품 (2.6%)	철근 및 봉강 (1.3%)	철근 및 봉강 (2.1%)	철근 및 봉강 (3.5%)	레미콘 (1.5%)	전기변환 장치 (2.7%)	건축용 금속제품 (2.1%)	레미콘 (2.0%)	구조물용 금속제품 (2.2%)
콘크리트 제품 (2.3%)	산업용 운반기계 (1.7%)	도로 (1.7%)	철강관 (2.2%)	경유 (2.0%)	아스콘 및 아스팔트 (1.5%)	건축용 금속제품 (2.0%)	기타 화학제품 (1.0%)	석제품 (2.0%)	구조물용 금속제품 (2.0%)	구조물용 금속제품 (1.5%)	경유 (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2.0%)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 (1.7%)	레미콘 (2.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는 4.3% 증가했는데, 다음에 열거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총지수의 상승률을 능가함.
- 건축용 금속공작물 42.2%, 아스팔트 39.1%, 중유 35.8%, 콘크리트 파일 29.2%, 건축용 판금 제품 28.8%,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6.1%, 보통 철선 18.2%, 각재 15.9%, 형강 15.2%, 고장력 철근 6.8%, 일반철근 6.3%, 봉강 5.5% 등임.

- 상기한 주요 건축자재 생산물가지수의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유래하는 바가 큼. 상기 기간 동안 수입물가지수(2015=100) 총지수(원화 기준)는 8.4% 증가했는데 이를 상회하는 주요 수입품에는 건설자재와 건설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음.
 - 고철 49.3%, 원유 47.6%, 석탄 코크스 45.0%, 강화목재 41.8%, 철광석 19.7%, 일반 합판 17.9%, 원목 10.7% 등임.
- 상기한 2018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부 부문별 주요 중간투입재와 그 투입비율은 앞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 세부 부문별로 투입 비중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요소들을 구별하면, ① 석회석을 원재료로 콘크리트제품과 레미콘, ② 철(철광석+석탄 코크스; 고철)을 원재료로 하는 건축용 및 구조용 금속제품, 철근 및 봉강, 철강관, ③ 원유(나프타)를 원재료로 하는 중유, 아스팔트, 아스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④ 원목을 원재료로 하는 목재, 제 각재 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2018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주요 자재와 그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가 기자재 수입가격 동향과 생산자물가지수 동향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품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2020년 9월 이후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상승보다는 건설 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
 - 건설업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한 중간투입재인 철강제품, 콘크리트제품, 목제품, 그리고 석유 및 화학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했음.
 - 상기한 건설업의 주요 중간재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해당 중간재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석탄 코크스, 고철, 원목, 원유 등의 수입물가지수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상기한 수입물가지수 상승은 Covid 19로 인하여 해외 주요 산지에서 생산활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 생산설비와 고용 인력이 축소되어 공급 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Covid 19와 그에 따른 해외의 공급 능력 위축, 그리고 정부의 예산 증가를 통한 SOC 투자 확대와 공급 확대를 수반하는 부동산 정책 등 건설자재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우리나라의 안전, 경제 그리고 미래 : 적기·적재·적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종전에 찾아볼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률, 역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내경제는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 관련 지표인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근래에 유례없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더불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은 2021년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여전히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는 전통적으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수단으로 과거부터 사용돼 왔으며,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른 어떤 수단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희 생산능력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아래에서 재정투자의 효과가 크며, 재정투자 중 SOC 투자가 여타의 교육, 보건 및 의료 등의 분야보다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SOC 투자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2021년 SOC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경기 회복 등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도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건을 위한 8년간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연말까지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77.3%에 불과하며, 집행 잔액은 약 19조원으로, 중앙정부의 2021년 SOC 예산의 70% 수준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집행 잔액이 큰 사업들 대부분이 국지도 등의 도로 개설 관련 사업과 공원, 주차장 등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하천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선형도로 개선 등의 안전 관련 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개발 관련 사업 등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으로 정부투자 확대만큼이나 계획된 예산을 적기(適期)·적재(適材)·적소(適所)에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21년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나, 백신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SOC 예산을 그 어느 시기보다 크게 책정한 만큼 정부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사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크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 경기회복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